

관세화 對 관세화 유예 1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결말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애초의 정부 협상 계획은 9월 말까지 각국의 입장을 정리해 타결을 본 후 12월 말까지 수정기간을 거쳐 최종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4차 협상까지 벌였으나, 너무 높은 개방수준을 요구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자칫하면 협상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DDA 농업협상이 연기가 되었으니 쌀 협상도 연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협상시한보다 더 뜨거운 논란거리는 관세화로 갈 것이냐 유예를 할 것이냐 인데, 최근 정부의 고위급 인사와 언론들은 저마다 관세화가 실익이 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호부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관세화 유리' 견해에 대해서 그 허와 실을 요목조목 따져 보기로 한다. 그 첫 번째로 이번호에서는 '관세화가 되어도 고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다만 관세화에 대한 정부 측이나 연구기관 등의 구체적인 주장과 논거는 대부분 비공개되어 있는 관계로 최근 나온 언론의 기사를 바탕으로 한 내용임을 밝힌다.

관세화를 고집하는 이유?

이번 협상은 지난 94년 UR협상 타결로 모든 농산물을 개방했으나, 국내 쌀만큼은 10년간 관세화 유예(특례조치)를 받았고, 이제 또 한번 관세화 유예를 받기 위한 협상이다. 만약 관세화로 결정한다면 협상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WTO에 '우리나라는 쌀을 관세화 하겠소' 하고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올해 1월에 쌀 재협상을 하기로 WTO에 통보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9개국 이 이번 협상에 참가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협상단을 꾸리고 지금까지 협상에 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협상이 만만치가 않다. 미국과 중국 등 핵심국가들이 관세화유예로 가게 되면 현재의 의무수입물량보다 대폭적인 수입을 요구하고 있고, 유예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더 많은 의무수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는 국가 차원에서 수입해와 가공용으로 사용되게끔 관리까지 해왔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 등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입하게 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시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4차 협상을 벌였으나 중국과 미국은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우리로써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들을 해오고 있어 협상단으로써는 무척이나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최근 농림부의 한 협상관계자는 “솔직히 관세화를 하지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 차리리 협상하기 쉽겠다”라고 까지 심정을 털어 놓았다. 물론 이 말뜻이 농민들이 관세화를 외치면 그만큼 협상에서 피해를 최소화한 관세화유예를 가져올 수 있는 전술로도 활용될 수 있겠다.

실제로 8월에 농촌경제연구원과의 토론회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 그러나 최근 노무현대통령과 정부관계자들의 ‘관세화유예가 피해가 크면 실익차원에서 관세화로 가겠다.’, ‘연말까지 협상국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관세화 전환 여부를 국민에게 묻겠다.’ 등의 발언이 난무하는 가운데, 혹 관세화유예를 포기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아닐까 우려된다.

결국 관세화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관세화유예로 가기에는 상대방이 너무 많은 요구를 해오고

있어 유예를 하더라도 별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기라도 하듯 최근 이곳저곳에서 관세화가 유리하다는 분석자료를 내놓고 있어 관세화 여론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협상에서 우리 쌀 농업의 어려움과 쌀의 공익적기능을 최대한 설득시켜 요구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함에도 지레 포기하려 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현재의 수준 만큼만 협상에서 얻어오게 되면 그게 최선일 것이다. 물론 이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문1. 관세화 되어도 400%이상의 관세기 부과된다?

관세화가 유리하다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물론 이 논거의 기본 전제는 관세화유예 시 높은 의무수입물량, 민간수입허용, 소비자 시판 허용 등 상대방의 요구를 다 받아 준 것일 때 유예보다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이지, 2004년과 같은 수준과 비교해서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

관세화가 유리하다는 입장 중의 하나는 관세화가 되어도 400%대의 고관세가 유지 된다는 것이다. 관세율은 수입 쌀 가격과 국내 쌀 가격의 가격차로 정해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UR타결 당시 대략 440%였다.

물론 2005년의 관세율은 정확한 것이 아니며, 농림부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비밀문서라고 밝혔다. 다만, 여러 연구기관의 분석자료를 종합해보

면 대략 390~450%라는 것이다.

현재 DDA협상이 2005년 이후까지 연기되었고, WTO농업협정이 발효되려면 향후 2~3년은 지나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대략 400%대 이상의 고관세가 2~3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또한 DDA협상에서 쌀을 특별품목으로 인정받게 되면 관세율을 추가적으로 약 30%까지 올릴 수 있어 향후 5년간 쌀수입이 2004년 현재 (20만5천톤)보다 적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향후 협상진행 계획

| 국 가 | 일 시 | 비 고 |
|--------------------------------|-----------|-------|
| 중 국 | 9월 말 | 5차 협상 |
| 미 국 | 9월 말 | 5차 협상 |
| 태 국 | 9월 17일 | 4차 협상 |
| 호 주 | 9월 20일 | 2차 협상 |
| 캐나다 아르헨티나,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 9월 22~24일 | 2차 협상 |

왜냐하면 만약 관세율이 450%라고 가정할 때 중국쌀 80kg의 최근 가격인 3만 8,400원에 450% 관세를 매기면 국산쌀 17만원 수준보다 4만원이 더 비싼 21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설령 DDA가 발효되기 전까지는 고관세로 유지 될 수 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가 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으 지가 불확실하다. 미국과 EU는 우리나라를 개도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쌀이 민감품목으로 인정받아 고관세를 유지하는 것 또한 선진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혜택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결국 우리 쌀이 DDA이후에도 400%대의 고관세를 유지하는 것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DDA 세부원칙 기본골격의 원칙에 따라 높은 관세일수록 관세감축 폭이 크고, 구간대 방식으로 관세를 점차적으로 인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용문

〈다음호 연재〉

의문2 관세화 전환 시 중국 쌀의 국내 진출이 어렵다?

최근 정부관계자나 각계의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인 중국의 최대 자포니카 생산지인 동북3성을 시찰하고 돌아온 결과, 중국이 우리나라에 높은 관세로 쌀을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실지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고품질미와 유기미가 대형 백화점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비춰볼때 과연 수출 여력이 없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의문3 관세화해도 SSG(특별세이프가드)발동을 하면 된다?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관세화를 하더라도 SSG를 발동하게 되면 국제가격의 6~7배가 높은 가격으로 국내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 국내 수입량은 극히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 관세화로 전환한 후 수입물량을 견뎌내지 못해 SSG를 발동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다. 대만이 발동하지 못한 이유와 우리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